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9
----------	------

제출년월일 : 2012. 4.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의 변경 기준에 맞게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량기업 및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 유공자 격려와 참여 분위기 조성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신설(안 제12조)

-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

나. 공장 신설시 설비투자 지원(안 제22조 제1항)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비용 3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내 기업 당 시비 최고 3억원 지원

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 신설(안 제25조)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착공, 7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이행의무 서류 제출 등

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6조)

- 근저당 설정, 소유권이전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투자이행 의무 확보 등

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29조)

- 1일 상시공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

바.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안 제31조)

- 포상금 지급 상한액 최고 5,000만원 → 최고 2억원
- 투자유치금액 미화(USD)기준 → 원화(KRW)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기 타

(1) 입법예고 (2012. 2. 24.~3. 15)결과 : 불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국내외 투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기업도시"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대상 토지를 말한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12.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이전(수도권기업의 이전과 신설·증설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 지원, 설비투자 지원, 교육훈련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고용 지원"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5. "설비투자 지원"이란 지방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착공일(건축물 매입·임대일 때에는 입주일)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에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교육훈련 지원"이란 지방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비투자 기간까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상시고용인원"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파견 근로자의 수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과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8.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계약 체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 관련 실·국장
 2.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기업·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4. 관내 기업체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업·투자 유치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활동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 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 기업을 신설, 증설할 때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투자 유치에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민간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제도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시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업·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실무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 중 1명을 기업·투자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 투자유치 자문위원에게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등

제13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입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장·그 밖의 재산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거나 「충주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

한 후 교육훈련을 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고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2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19조(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설·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신설·증설하는 기업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 시비는 지방비 분담비율을 따른다. 다만, 초과 지원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은 시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타 시·도 이전 기업과 공장 신설·증설 투자 지원

제20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지역 내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전보조금 지원은 제19조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지방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지방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타 시·도 이전기업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제15조제2항을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되, 지방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신설·증설시 설비투자 지원) ① 제19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 지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 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시비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상시고용 예정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사업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며 3년 동안 인원 규모를 유지
2.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

② 도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업체가 시 지역 내에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면 투자금액의

802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지방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업장을 폐쇄·축소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23조(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와의 협의·심의를 통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타 시·도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내로 입주할 때 토지금액과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한도) 제20조와 제22조의 보조금은 교육훈련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고 지방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할 때는 건물 임차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50명 미만이면 연간 건물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2.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연간 건물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3.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연간 건물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5억원까지

②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토지·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물 임차료 지원액은 보조금 신청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의3(교육연수시설 투자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대학교, 대학 등)에 토지,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0억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중 1일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입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되면 실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 일부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과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임시등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4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 이행 각서를 받고 맨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관리하는 대장을 갖춰 놓고 작성하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면 지원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나 사업개시 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을 했을 때
 2. 지원을 받아 사들인 토지 등을 계약 후 7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을 때
 4. 이전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5.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6.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았을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8. 교육훈련 지원·고용 지원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했을 때
 9.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기업이 제2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상시고용인원이 지원기준에 미달할 때
 10. 신설·증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시고용인원을 2년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3년 동안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보조금 분담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이나 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때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과 지원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다만, 타 시·도 이전기업과 공장 증축을 지원할 때, 도와 시가 분담하는 부담비율과 지원절차 등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한 후 결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와 기업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와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인사 가산점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는 국내외 투자와 수도권이나 타 시·도 소재 기업을 유치했을 때로 한정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공무원,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이며 2명 이상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다만, 투자기업과 투자 기업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④ 투자유치 유공자는 투자유치금액 즉, 실제 투자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투자유치 경위서를 작성하여 최초 투자가 선행된 시점(용지매입대금 1차분 납부 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최초 투자일(용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의 총 투자액을 계산해서 정한 후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포상금액은 감한다.

⑥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말까지 이전(신설·증설을 포함한다)을
완료한 기업은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19조 관련)

- ◆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

[별표 2]

타 시·도 지역구분과 지원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과 대상
타 시 · 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별표 1을 제외한 지역과 시 · 도	<p>○ 수도권과 타 시 · 도에서 사업기간</p> <p>- 3년 이상인 기업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p> <p>○ 이전기업의 규모</p> <p><본사와 공장></p> <p>-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p> <p><기업부설연구소></p> <p>- 총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p> <p><문화산업 · 연구 · 개발기업></p> <p>- 총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p> <p>○ 지원대상 업종</p> <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p>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31조 관련)

□ 민간인 및 단체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	투자금액×0.2%	2,000만원
100억원 초과~500억원까지	2,0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4%	3,600만원
500억원 초과~1,000억원까지	3,6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3%	5,100만원
1,000억원 초과~5,000억원까지	5,1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2%	13,100만원
5,000억원 초과	14,100만원+(투자금액-5,000억원)×0.02%	2억원

□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	투자금액×0.05%	500만원
100억원 초과~500억원까지	5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1%	900만원
500억원 초과~1,000억원까지	9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5%	1,150만원
1,000억원 초과~5,000억원까지	1,15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1%	1,550만원
5,000억원 초과	1,550만원+(투자금액-5,000억원)×0.01%	3,000만원

※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평정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제31조 관련)

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투 자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고 또는 시작일			
	사업내용			
	투자금액	만원 (USD 상당)		
	실제투자금액	만원 (USD 상당)		
투자방법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투자지역				
질적평가	1. 기술수준과 기술이전효과 : 2. 고용창출 효과 :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포상금 지 급 대상과 기여도	소 속	직위(급)	성 명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p>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충주시장 귀하</p>				
<p>[갖출 서류]</p> <div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수 수 료 없 음 </div> <p>1. 투자유치 활동경위서 1부 (신청자 작성, 투자가 확인) 2. 그 밖의 투자유치 관련 증명서류 1부</p>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2012.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

제5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단, 유치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투자유치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일 것

2.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③신·증설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3.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4.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명 미만인 수도권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 2항제1호·제3호 및 본사, 공장, 연구소의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3.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에 의한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별 최근년도의 보조금집행액, 설비투자액, 지역의 낙후도,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추후 재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신·증설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6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입법예고결과 의견검토 보고

의견제출자		접 수 의 건	검 토 결 과	반영여부
주 소	성 명			
충주시 애향로 10	이○○	① 제22조(신설·증설시 설비투자 지원)제2항 중 도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업체 ... ⇒ 의견)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기준인 30명으로 동일 적용 요청	① 도 조례 제29조 별표2에 따라 타시·도 기업이전 및 도내 공장증설시 지원 기준 미충족	미반영
		②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1호 중 ○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투자 ⇒ 의견)투자금액이 과다함	② ○ 충청북도의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세부지원기준 별표6, 별표7에 따라 중소 기업, 중견기업 범위 안내 ○ 도 조례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1항제1호 내용 반영 ⇒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투자	일부반영
		③ 기타의견 ○ 이전(신·증설 포함)사업기간이 짧아서 기업유치에 어려움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으로서 투자이행촉진과 일자리 창출 의무 부과임	미반영

※ 검토자료 보고서상의 의견제출자는 이름을 “김○○” 식으로 기재 (실명기재 금함)